

이재명, 檢 소환 불출석... 민주당 “정치 보복” 지원사격

“서면조사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
김건희 여사 이슈 덮겠다는 것
이 대표, 중앙지검에 답변서 보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윤석열 정부 ‘정치 보복’로 규정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소환 조사 불출석 방침을 밝혔다.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 측은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서면조사 답변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가 서면 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해 잠겨 있다. /뉴시스

술에 응하지 않아 출석 요구를 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한 데 대해 “(정부가)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가 전면

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 대표) 소환장이 날아오고, 이와 관련해 당으로서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치는 건 거의 전광석화처럼 하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대표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등 의혹 덮기 위한 수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더 의심스러운 정황은 김건희 국민검증단이 충격적인 검증을 예고한 날이 8월 3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요청은 9월 1일”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먼저 털 듯 털어도 겨우 말꼬리 하나 붙잡아놓고, 같은 날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을 굳이 검찰 출석을 요청한 것은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재명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모른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공무원에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 등이 대표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보고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김문기

차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낸 것은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선거법 재판으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차장을 소개 받아 통화해 (김 차장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많아 실무팀장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다.

백현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안 수석대변인은 “국토부가 2014년 말까지인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언론도 직무 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당시) 기자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간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 대표가 관련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與 “태풍 피해, 당 차원 지원책 적극 마련”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
“농작물 가격 안정화도 만전”

국민의힘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 차원에서 6일, 주요 시·도당 위원장과 긴급 화상 회의를 가졌다. 국회에서 진행한 화상 회의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및 주요 시·도당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불과 나흘 후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라며 “당장 주택 침수 피해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마음 편히 명절을 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분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정부는 신속한 지원 및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태풍으로 제주, 부산, 울산 등 남부 지역 피해가 상당하다. 제주 지역은 누적 10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전체 1만여 가구가 정전됐고, 제주도당도 정전 피해가 있었다”며 “울산도 (태풍으로) 1명이 실종됐다고

한다. 실종자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한다”는 말도 했다.

회의에서는 이 같은 지역별 태풍 피해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복구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논의도 있었다.

이 밖에 권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에 태풍 피해가 겹쳐 추석 및 농작물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국회 또는 당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석기 사무총장도 “피해 상황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은 태풍 힌남노 대비 차원에서 중앙당 총무국 및 조직국과 함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꾸려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대비해왔다.

한편 이날 화상 회의에서 권 원내대

표는 “이번 태풍의 위력이 강했음에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국민 협조 덕분”이라며 “어제(5일) 늦은 오후 긴급하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휴업이 결정됐음에도 행정 조치에 적극 협력해줬고 기업도 재택·유연근무 조치에 동참해 감사하다”는 말도 했다.

/최영훈 기자

尹, ‘선조치·후보고’ 신속한 대응 재차 지시

>> 1면 ‘태풍 대응 철야’서 계속

윤 대통령이 회의를 다시 소집한 시점은 태풍의 중심이 포항을 막 벗어나 동해로 빠져나가던 때다.

윤 대통령은 전날(5일) 밤 9시 30분에는 집무실에서, 밤 11시 40분부터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연이어 심야 점검 회의를 열고 태풍 상륙 상황 등을 보고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고, 6일 오전 5시에는 다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참모들을 향해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이어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에게 “현재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간과 겹쳐 하천 범람 등 피해

가 우려되는 만큼 더욱 긴장을 놓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을 대비하면서 거듭 강조한 ‘선조치·후보고’의 신속한 대응을 재차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초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침수 진행 이전에 주민들의 사전 대피와 도로 통제 등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수시로 재난 문자로 주민들의 대피를 인도했으며 포항 남구 배송면 제내리 마을의 침수 우려에 처한 주민 200여명을 인근 학교로 대피하도록 유도한 사례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이 한 분이라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정부가 한발 앞서 신속하게 나서달라”며 주민 안전에 더욱 몰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벽지와 오지마을 등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노약자 등 대피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구조&구급 관계자들이 이분들을 직접 모셔갈 수 있을 정도의 대비태세를 지시했다.

김 수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독려해서 사전 대피와 도로 통제에 대한 여러 강조점이 있었다”며 “군과 경찰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국방부 경찰청에서는 지역별로 협력 체계에 따라 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대피, 도로 통제에 더 철저히 신경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항에서 주민 신고로 신속대응부대로 활동하던 해병대가 특과돼 주민을 구조했다”며 “7개의 신속대응부대, 현재 활동 중인 15개의 해상, 공중·지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색구조부대가 단 한 분의 주민이라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태풍과 함께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중부세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서 최종 처리 예정

일시적 2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중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중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중부세법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추가 보유자 등에 대해 중부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으로 중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세대 1주택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세

금 납부 유예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중부세 특별 공제 기준 상향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추후 정기국회 기간 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중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로 ▲공정시장 가액비율 하향(100→60%) ▲중부세 부과 기준선 상향(11억→14억원) 등에 대해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 제안에 “정부가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조정해 이미 감액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중부세 부과 기준을 3억원 올려 특별 공제하는 것은 이중이자 부차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영훈 기자